

(첨부)

##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(10.15-21)

### 1 경제일반

#### 1. 일본정부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 대응책 마련

□ 아베총리는 10.15(월) 개최된 임시각의에서 예정대로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10%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하고, 각종 정책을 총동원해 증세 실시에 대비할 것을 지시

○ 아베 총리는 증세 전 先수요(사재기수요) 및 증세 후 반동으로 소비 감소 등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대응을 관계각료에게 지시

※ 현행 8%로 소비세 인상이 실시된 직후인 2014년 4~6월기 일본의 국내개인소비는 실질 약 14조 엔 감소하였으며, 소비가 증세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된 바 있음.

※ 「소비세」는 1989년 4월 당시 다케시타 내각에서 세율 3%로 최초 도입  
- 1997년 4월 5%로 인상, 아베내각에서 2014년 4월 8%로 인상  
- 10%로의 소비세율 인상은 당초 2015년 10월 실시 예정이었으나, 소비위축 등 우려를 이유로 17년 7월로 1차 연기(14년 11월 발표), 이후 신흥국경제 침체 및 세계경제 위기 리스크 회피를 이유로 재차 19년 10월로 연기(16년 6월 발표).

※ 17년도 소비세수는 17.5조엔이었으며 증세실시로 5조엔 이상 세수증대를 예상, 경감 세율 도입시 약 1조엔 세수감소 전망  
- 일 정부는 증가된 세수 중 1.7조엔은 유아교육, 보육 무상화 지원, 1.1조엔은 연금 개혁 등 사회보장 내실화, 나머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방침

□ 일본 정부는 ▲증세 이전 先수요(사재기수요) 및 ▲증세 이후 소비격감의 반동을 줄이기 위하여 △일부 소비품목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, △중소사업장 비현금구매에 대해 일정기간 2% 포인트 환원, △자동차, 주택 등 내구재에 대한 대책을 계획중임.

○ (경감세율) “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품전반” 및 “주2회 이상

발행하는 신문”에 대해 8%의 경감세율을 인정 예정

- 다만 편의점의 경우 매장내 소비(eat-in)시 소비세율 10%, 포장 (take-out)시 8%가 적용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.

○ (2% 포인트 환원) 중소기업에서의 비현금(cashless) 결제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구매금액의 2%를 차후 구매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포인트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

○ (예산안) 2019~20년도 예산에 특별조치를 마련, 증세 후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

○ 증세 전후, 사업자의 유연한 가격 설정을 돕는 가이드라인의 정비

□ 한편,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중소기업에서의 비현금(cashless) 구매에 대해 2% 포인트 환원 제도를 10%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뿐 아니라 8% 세율이 적용되는 음식료품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.

○ (효과) 동 대책 실현시 식품 등에는 실질적으로 6% 정도 소비세가 부과됨. 동 대책을 통해 비현금결제 보급 확대도 도모

○ (대상 기준) 대상점포는 소비자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중소기업장으로, 소매점, 음식점, 숙박업 등 포함

○ (실시기간) 19년 10월부터 최대 1년 이내로 정할 방침

○ (문제점) △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신용카드사용이 어려운 층에 대한 차별, △현금사용비율이 높은 일본에서 동 제도의 효과성이 지적됨.

※ 신용카드 등 비현금결제비율: 한국(89%), 중국(60%), 미·유럽(50% 전후), 일본(18%)

□ 또한 기타 중소기업 대상 증세 대책을 마련중임.

○ 음식료품(세율 8%) 및 非음식료품(10%)을 별도 취급해야하는 중소기업장에 복수세율을 취급 가능한 금전출납기의 도입과 설치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원 예정

※ 점포수가 많은 대기업은 ‘증세 3~6개월 이전 테스트예정인 기업이 많다’고 파악되나, 일본상공회의소의 조사(6~8월실시)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%가 아직 준비 미실시  
-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9월말 시점에 보조금신청은 81,000건으로, 총 이용예산건수 (33만건)의 20%를 조금 넘는 수준

○ 정부는 신용카드회사에 소매상 등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 경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협의중

※ 소규모사업장이 카드단말기 설치 및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해 「2% 포인트환원」 대책의 효과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

□ 한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(山口那津) 대표는 생활필수품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 지원조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, ‘프리미엄 상품권 \*’ 발행 방안 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, 이에 대해 ‘선심성 정책’이라는 지적도 다수 나오고 있음.

\* 프리미엄 상품권은 구매금액에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더한 액면가의 상품권으로, 지난 소비세 증세(8%) 당시에도 2014년도 보정예산에 교부금을 계상하여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등이 발행한 바 있음.

## 2. 원전사고 쓰나미 피해대책 미비 책임 관련, 도쿄전력 舊경영진 피고인 질문 실시

○ 10.17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,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제 기소된 도쿄전력 舊경영진 3명의 제31회 공판이 1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, 무토 사카에(武藤栄) 전 부사장이 과거 동건에 대한 전 부하직원의 증언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원전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주목 중

\* 무토 사카에(武藤栄) 전부사장, 타케쿠로 이치로(武黒一郎) 전부사장, 가쓰마타 쓰네히사(勝俣恒久) 전회장

- 공판의 주요 쟁점은 舊경영진의 거대 쓰나미 및 원전사고 예측여부 및 미흡한 대책 마련의 책임소재로, 금번 공판 피고인인 무토 전 부사장은 2011년 대지진 전(2008년)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 검토 과정에서 ‘토목조사 그룹’ 으로부터 ‘15.7m의 쓰나미가 덮쳐 올 가능성이 있다’ 는 보고를 받았으며, 동 보고에 대해 ‘(쓰나미 예측치(시산) 수치를 낮출 방법은 없는지’ 언급\*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, 무토 전 부사장은 동 증언에 대해 전면 부정

\* 올 9월 공판에서 도쿄전력의 ‘원자력.입지본부’의 전(前)간부 공술조서상 언급

- 예측치의 근거가 된 일본정부의 ‘장기평가’ 와 관련해, 무토 등 舊 경영진이 참여한 2008년 쓰나미 대책 회의에서 쓰나미대책에 장기평가를 넣어야 한다는 권고 및 방침이 제시되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‘전 담당자로부터 ‘장기평가에는 신뢰성이 없다’ 는 얘기를 들었’ 으며, 회의에서 동 건에 대해 제대로 다룬 기억이 없다고 진술

○ 무토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 일본내에서는 ‘무토 전 부사장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’, ‘무토의 사죄는 말 뿐이다’ 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, 원전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판이 진행될 예정임.

\* 무토 전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질문은 종료되었고, 10.19 타케쿠로 이치로(武黒一郎) 전 부사장, 30일에는 가쓰마타 쓰네히사(勝俣恒久) 전 회장의 피고인 질문이 실시될 예정

참조 :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책임소재 관련 경위(10.16 요미우리 조간 38면)
2002.7월 국가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산리쿠 해안 - 보소 해안에서 매그니튜드 8급의 쓰나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장기평가를 공표
2008.6월 도쿄전력의 ‘토목조사 그룹’이 장기평가를 토대로 쓰나미의 예측치(試算) 결과가 최대 15.7m인 사실을 무토 사카에 피고에게 보고
2008.7월 무토 전 부사장이 예측치(試算)에 근거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방침 등을 동 그룹에 전달
2008.8월 무토 피고가 다케쿠로 이치로 피고에게 예측치(試算) 결과를 보고
2009.2월 가쓰마타 쓰네히사 피고가 참석한 ‘오전 회의’ 시, 참석자가 ‘14미터 정도의 해일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’고 발언
2011.3월 동일본대지진 발생. 거대 쓰나미 발생으로 원전 손상

##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

### 3. 일본 재무성 2018년 9월 무역통계 발표

#### 1. 총액

□ 10.18 재무성이 발표한 9월 무역통계(속보, 통관기준)에 따르면 9월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78.7% 감소한 1,396억엔 흑자로, 3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함. 흑자액은 전년동월대비 78.7% 감소.

○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.2% 감소한 6조 7,266억엔으로, 2016년 11월 이래 22개월만에 감소함. 태풍 21호 간사이 상륙, 홋카이도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물류 및 생산활동 타격이 컸음.

- 9월 간사이공항 경유 수출은 2,336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8.0%나 급감하였고, 홋카이도 역시 지진 발생으로 수출이 1.9% 감소함.

[ 2018.9월 무역수지 ]

수출	금액	6조 7,266억 엔	▲1.2%	22개월 만에 감소
	물량지수	105.6	▲4.8%	7개월 만에 감소
수입	금액	6조 5,871억 엔	+7.0%	6개월 연속 증가
	물량지수	99.0	▲2.7%	3개월 만에 감소
무역수지	금액	1,396억 엔	▲78.7%	3개월 만에 흑자

※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

## 2. 지역별

### (미국)

○ 이륜자동차(+72.6%), 음향·영상기기(+35.3%)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고, 액화석유가스(+153.0%), 석유제품(+134.6%) 등의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▲4.0% 감소한 5,903억 엔 흑자(3개월 연속 감소)

[ 對미국 ]

수출	1조 2,944억 엔	▲0.2%	2개월 만에 감소
수입	7,042억 엔	+3.1%	3개월 연속 증가
무역수지	5,903억 엔	▲4.0%	3개월 연속 감소

### (중국)

○ 반도체등제조장치(50.8%) 및 자동차 부분품(+17.9%)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, 통신기(-39.7%) 및 반도체등전자부품(-23.1%) 등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3,702억 엔 적자(6개월 연속 적자)

[ 對중국 ]

수출	1조 2,627억 엔	▲1.7%	7개월 만에 감소
수입	1조 6,329억 엔	+4.2%	3개월 연속 증가
무역수지	▲3,702억 엔	+30.6%	6개월 연속 적자

### (아시아)

○ 석유제품(+125.1%) 및 비철금속광(+124.6%) 등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고, 광물성연료(+47.7%), 반도체 등 제조장치(+16.8%)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9월로는 과거 최고 수출액을 기록, 무역수지는 ▲7.5% 감소한 5,675억 엔 흑자

[ 對아시아 ]

수출	3조 7,386억 엔	+0.9%	7개월 연속 증가
수입	3조 1,711억 엔	+2.6%	6개월 연속 증가
무역수지	5,675억 엔	▲7.5%	8개월 연속 흑자

### (EU)

○ 선박(-46.5%) 및 자동차(-23.8%) 등 수출액이 감소하였고, 유기화합물(+70.5%) 및 항공기류(31.9%)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9월로는 과거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며 ▲208억 엔 적자(3개월 연속 적자)

[ 對EU ]

수출	7,351억 엔	▲4.1%	20개월 만에 감소
수입	7,559억 엔	+0.7%	19개월 연속 증가
무역수지	▲208억 엔	-	3개월 연속 적자

## 3 대외경제 동향

### 4. 일미 상품무역협정 협상, 내년1월 개시 전망

□ 일미 상품무역협정(TAG) 협상을 위해 미 정부는 대통령무역촉진권한법(TPA)에 근거해 10.16일 의회에 일본과의 협상개시를 통지한 바, 빠른편 2019년 1월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. 이미 농산물 관세인하 및 환율조항에 대한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음.

○ 지난 9월 일미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상품무역협정(TAG) 협상에 합의하였으나, 미국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FTA 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보여줌.  
 - 펜스 부통령은 ‘일본과 역사적인 2국간 FTA 협상을 시작함’ 이라고 언급하였으며, 퍼듀 미 농무장관은 10.4일 농산품 협상에 대해 일-EU 경제동반자협정(EPA)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을 상회하는 시장개방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.

○ 한편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부장은 10.13 TAG 협정문에 통화약세 유도를 방지하는 ‘환율조항’을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, 일본 정부 내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음.

- 므누신 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일부 언론에 ‘우리의 목적은 모든 국가와의 협정에서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’ 라며 환율조항 추가에 의욕을 표명함.

- 이에 대해, 10.15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‘전문가 차원에서 치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’이라며 환율 문제는 통상협상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.

- 또한, 일본은행은 ‘금융완화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것으로, 통화절상 의도는 전혀 없다’고 주장하였으나, 미국이 환율조항을 방패삼아 금융정책에까지 개입하게 된다면, 이는 엔화강세 등 시장 불안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
· 실제로 므누신 장관의 발언 이후, 엔화강세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됨에 따라 10.15 닷케이평균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등 일본증시가 다시 매도세 압박을 받고 있음\*.

\* 10.16 닷케이평균주가지수 지난 주말대비 423엔(1.9%) 하락한 2만 2,271엔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8월 21일 이래 최저 수준을 보임.

□ 한편 일미 상품무역협정의 성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.

○ 10.9일 일미공동성명은 ‘과거의 경제연합협정에서 약속한 양허내용이 최대한’ 이라고 명기했으며, 이에 근거해 정부관계자는 ‘TPP 이상의 양보는 없다’ 고 한 바 있음.

○ 그러나 모테기 경제재생대신은 16일 기자회견에서 ‘전체적으로 최대한의 양보는 TPP이나, (품목별 최대는) 각각 다르다’ 고 발언함. 치즈 등 일부 품목은 일-EU가 7월 서명한 EPA가 TPP보다 자유화 수준이 높은 바,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품목에서 TPP 이상의 양보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됨.

**5. 일중 정상회담(10.26) 개최준비 관련**

□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10.26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.

○ 2018년은 일중 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는 해로 5월에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였음.

※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의 총리회담도 정상회담으로 표기

※ 양국간 정상회담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에 이어 8번째이며, 국제회의의 참석계기 개최된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제2차 정권 출범 이후 최초임.

□ 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 관련 △ ‘일중 이노베이션-지적재산대화(가칭)’ 의 설치, △통화스왑 재개(3조엔 규모), △해난구조 분야 협력 등에 관하여 사전 조율중임.

○ ‘일중 이노베이션-지적재산대화(가칭)’ 는 양국 각료급으로 구성된 ‘일-중 고위급 경제대화’ 산하에 설치되어 이르면 연내 첫 회합을 열 예정으로, △이노베이션, △지적재산보호 외 △디지털 경제, △산업간 교류, △기업 간 교류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하는 案을 논의중

○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협상(스왑프)\* 의 상한을 3조엔

## 규모로 늘려 협의를 재개

※ 일중 스왑협정은 센카쿠열도(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) 문제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 실효되었으나, 올 5월 중국의 리커창 총리 방일 시 아베 총리와 재개 협의개시에 합의한 바 있음. (실효 전 일중간 통화스왑 상한은 약 30억 달러였으나, 규모를 10배로 늘려 협의할 예정)

○ 또한 아베 총리는 제3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'일·중 제3국시장 협력포럼'에 참석하여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30건 이상의 합의문서를 교환할 전망이며, 일본의 對中수출 식품 규모의 완화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 온 바, 수입 제한 대상 현(縣)의 축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

## 4 기 타

### 6. 일본기업, 일손부족으로 인한 도산 심각

□ 심각한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일본국내 기업 도산이 건수 및 부채총액 면에서 모두 과거 최대 속도로 증가중임. 이유로는 종업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, 사원 유치·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실시한 결과 수지가 악화한 경우가 많음.

○ 「도쿄상공리서치」에 따르면 1~9월간 일손부족 도산 부채총액은 417억엔, 도산건수는 299건으로, 10월 중순경이면 2017년 연간수준(317건)을 초과할 전망

※ 일손부족문제가 표면화되어 동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는 건수로는 340건(2015년), 부채총액으로는 541억엔(2013년)이었으나, 금년도는 동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임.

○ 도산이유로는 종업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지속을 단념하는 “구인난 타입”이 전년동기대비 48.1% 증가한 40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인건비 급등도 41.6% 증가한 17건임.

○ 도산기업은 자본금 1천만엔 미만의 영세기업이 55.8%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, 1천만엔 이상 1억엔 미만의 중소기업도 43.8%에 달함.

○ 도쿄상공리서치는 ‘일손부족은 블루칼라 직종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, 도산원인의 80% 이상이 후계자 문제로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 어렵다’고 언급함.

### 7. 면진·제진장치 제조업체 검사수치 조작 발각

□ 국토교통성은 부품제조업체 「KYB」와 자회사 「카야바시스템즈머시너리」가 제조한 건물용 면진(免震), 제진(制震)장치인 오일댐퍼 검사기록이 조작되어 국토교통성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출하되었다고 발표함.

○ (조작범위) 동 기록 조작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, 전국 아파트, 병원,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986건에 사용되었다고 함.

- 원자력 발전소 시설의 일부, 도쿄 스카이트리, 도쿄·오사카·가나가와 등 도도부현청의 일부시설,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일부, 각지 공립병원 등에도 KYB 등의 면진장치가 사용되었다고 밝혀짐.

- 국토교통성은 조작규모가 큰 제품이 사용된 7건에 대해 제3자기관의 구조안전성 검증 결과 ‘강진발생시에도 건축물에는 영향이 있어도 인명손상에는 미치지 않는 정도이다’라고 하는 한편 그 외 979건에 대해 조작 범위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.

- 그러나 전문가 및 관료들은 ‘법령대로 납품하지 않은 기술자의 윤리관’ 및 ‘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’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.

### 8. 일본 풍진 유행

□ 국립감염증연구원소는 금년 보고된 풍진환자수가 1,103명에 달한다고 발표함. 작년 1년간(93명)의 약 12배에 달해, 2012-2013년 풍진이 대유행했던 시기에 필적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.

○ 이번달 1~7일 일주일간 신규보고된 환자수가 135명으로, 5주 연속

100명을 초과

-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가 45명으로 가장 많고, 이어 가나가와(21명), 치바(20명), 사이타마(7명), 군마(6명), 아이치, 효고(각 5명)임.
- 이미 40개 도도부현에서 풍진이 유행하고 있으며, 전체 환자수 중 남성 916명, 여성 187명임. 특히 30대~50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며, 백신 접종이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.
- 현재는 남녀 모두 유아기에 풍진 백신 정기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과거에는 여성만을 백신접종대상으로 하였기에 1979년 4월 1일 이전 태어난 남성은 접종기회가 없었음.
  - 항체보유율은 ‘95% 이상’ 이 바람직하나, 30대 후반~50대 남성에서는 70~80%밖에 되지 않음.
  - 임신초기 여성이 풍진에 감염되는 경우 태아에게 난청 및 심장병 등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음.
  - 후생노동성은 이번달 2일, 풍진이 계속 유행중인 도쿄, 가나가와 등 5개 도·현에 대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 및 임신중 여성의 동거가족에게 항체검사를 하도록 통지하고, 적절한 백신접종 실시를 권고중임.

/끝/